

차기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책방향에 대하여

환경정책은 여러 가지 국가정책 기능들 중에서도

특히, 보건·복지정책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분야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보수, 진보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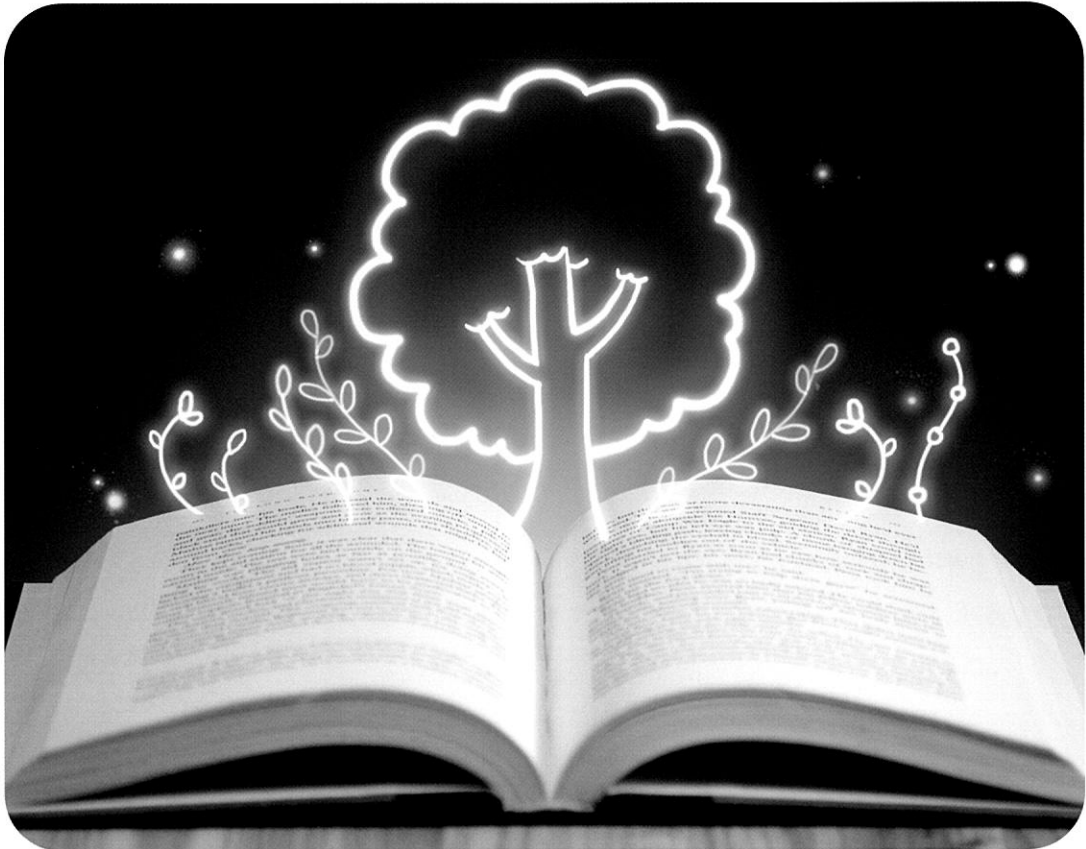
문 정 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전 환경부차관)

연세대 행정학과,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UNC MPA

[전]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현] 한국외국어대학 환경학과 석좌교수, [현] 코오롱생명과학(주) 고문, 홍조근정훈장

tel. 02-2182-3810 | jungho1113@kolon.com



그동안 환경정책은 개발과 성장위주의 정권이 들어서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후퇴하거나 담보하는 상태를 보인 반면, 경제상황이 좋은 시기이거나 복지와 분배 중심의 정권에서는 환경정책이 상대적으로 대접을 받는다고 할까, 제 목소리를 낸다는 인식들이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 같다. 그런데, 다음 정권에서는 보수나 진보와 관계없이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고 있고 경제상황은 국·내외적으로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 환경정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다음 정권에서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최근 18대 대선후보 모두가 나름대로 환경 분야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약이라는 것이 관련 분야의 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공약이 모두 실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은 과거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공약의 내용보다는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방향이 무엇이나 하는 것일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환경의 질에 대한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국민의 욕구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은 꾸준히 강화되고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책의 강화, 발전이 반드시 규제강화나 새로운 환경시책의 추진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제도는 지난 1980년 환경청이 정부 조직으로 처음 발족한 이래 다양한 선진 제도를 도입, 발전시켜 왔고, 그 결과 제도적인 틀에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 내지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정부의 환경정책은 기존의 정책들이 당초 의도한 취지대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정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정책이 기획 의도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정책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탁상행정이 될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정책뿐만 아니라 해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각종 환경사업들도 주어진 재원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최적의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과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행정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역대 정권에서 항상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여러 가지 환경 관련 기능들 간의 조화 내지는 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들이 여러 분야에 존재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간 물 관련 기능, 에너지 관련 기능, 산림행정과 자연보전 정책 등 다양한 정부 기능들이 부처 간의 힘겨루기와 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인적·물적 자원을 낭비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이제는 그러한 부처 간의 영역다툼에서 벗어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때이다. 즉, 다음 정부에서는 그간 부처 간 유사기능을 두고 견지해왔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분을 벗어던지고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론을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지난 정부의 환경정책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하여 잘 된 정책은 계승 발전시켜나가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는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특히 차기 정부의 대통령 인수위에서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녹색성장이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은 그 방향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고 이미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되, 다만 속도와 내용에 있어서는 무늬만 녹색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더욱 보완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정에 대한 논란과 토목사업 중심이었다는 비판을 진지하게 수용하여 향후에는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방향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고, 원자력 발전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환경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국민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종결하고 참여와 화합의 시대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 내세울 수 있는 자원 이라곤 우수한 인적 자원이 전부인데,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올바른 정책이 세워지기도 어렵거니와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는 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 전문가와 기업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 함께하기 위한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UN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통령 직속 하에 지속발전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다. 너무 민간 환경단체 위주로 운영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녹색성장위원회로 사실상 대체되었는데, 녹색위는 반대로 너무 정부 위주로 운영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 부문별 참여자들 간의 균형은 물론 위원회 운영도 조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차원의 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음 정부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는 녹색정부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